국정신문

1997년 9월 15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南廷判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 110-716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 전화(02)733-5480(대)·733-5484(편집) FAX 733-5374

경제난 극복

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姜慶植 경제 부총리 특별기고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의 신화는 끝난 것인가'라는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언론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어려움은 최근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나 잠재력으로 보아 '위기'라고까지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최근 외국의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 경제 및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발상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 경제 위기는 아니다"

사실 우리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작년 2·4분기 이후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가격이 급락하여 발생한 교역조건의 악화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세계 각국이 시장경제원리의 이념하에 정보화·자율화·개방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에 뒤쳐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겠다. 즉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OECD에도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러한 외형적 성과만큼 발상과 행동이 달라지지 못했고 남들처럼 경제·사회의 틀을 혁신하지도 못했다. 세계의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의 주인이 되려 하기 보다는 아직도 과거 개발시대에 통용되던 낡은 의식과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국제규범이나 관례에 순응하고 동화하기 보다는 자기방식에 집착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채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장경제의 틀'은 우선 창의를 살리고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개방화되는 환경에 걸맞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으로 우리 규칙을 바꾸어가는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런 새 틀에 걸맞게 정책발상과 운영방식을 전환하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재계와 금융계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허약한 체력으로는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우선 당장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고비를 넘겨 놓고 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할지 모르나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다.

2~3년내 새 틀 마련 긴요

당장의 어려움을 예산을 늘리고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손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체질이 약화되어 얻은 병은 체질을 먼저 고쳐야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은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해가는 길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초이래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 등 당면한 경제안정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다. 금융개혁의 추진, 벤처·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발전여건 조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등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21개 과제를 국가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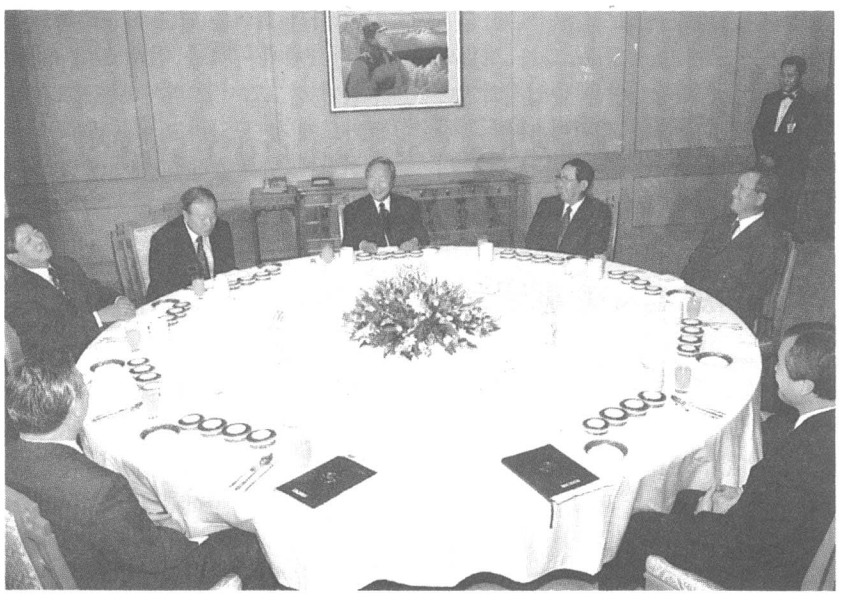
21개 국가과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공공부문의 과제,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경제·사회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인프라의 효율향상을 위한 과제,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과제들로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제도와 정책·행동양식을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해 당장 실행에 옮기거나 늦어도 2~3년내에 반드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기득권 양보 경쟁력 높여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후진국 모든 나라가 개방화·정보화·지방화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현재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경제체제, 잘못된 경제정책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북한을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최빈국으로 전락시켰다. 불과 10, 20년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개혁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대하는 풍조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조금씩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여 보다 유연한 적응능력 높은 사회를 이룩해야만 21세기에 확실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

정부지원으로 고비 넘길 순 없어
공공부문 수요자 중심 변신 필요
인프라 효율·정보화 기술 확보시급



"난국돌파에 경제주체 힘 모아야"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의 경제상황 및 경제활력 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등 기업의 노력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成圭기자】

4·5面 기획 특집

國政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로 9월22일字 쉽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대검 학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기관의 대책 및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의 학교폭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총리실 주재로 8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반 회의를 열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약물·성기구 등을 파는 행위와 유해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민간감시단의 협조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원지도 검사제 활성화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구축을 위해 현재 서울YMCA 등 11개 단체의 민간감시단 2천5백명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제조·판매 등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감시단 규모를 약 3만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앙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이달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검은 특히 지난 3일 검찰총장실을 비롯, 비서실·당직실 등 4곳에 학원폭력 피해 신고 직통전화(3480-2828) 및 팩시밀리(3480-2829)를 마련, 24시간 신고 접수토록 하고 전국 52개 지검 및 지청에도 신고전화 개설을 비롯 학원담당 지도 검사제를 활성화하는 등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금품갈취 교칙 엄격적용

교육부도 지난 5일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의 신속한 신고체제 구축을 위해 교내 및 학교 주변에 신고엽서를 비치하는 '그린 포스트카드제'를 도입하고 에듀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불량서클 결성 및 집단 괴롭힘·금품갈취 등 각종 비행과 교사의 지도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에 대해 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특히 중도탈락 학생이 복교할 경우 반드시 '복교희망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고 상습적인 비행을 저질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복교생에 대해 퇴학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全宣珠기자

"국민연금 일시 반환 내년 7월부터 없애"

'일시금지급' 국민연금 본 뜻 아니다

보건복지부

9월 10일자, 서울경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국민연금 실시로 회사가 부도난 직장인들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취업을 못해도 도시자영업자로 편입,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실직자는 그동안 불입해온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덧붙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은 복직후 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것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특히 내년 7월1일부터 전국민연금이 실시되면 실직자가 1년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유예 대상자로 분류돼 일정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돼 있다.

현재의 반환일시금제는 노후생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예외적 규정으로, 1년내 재취업하지 못한 실직자,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제도를 두지 않거나 사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지급수준도 납부보험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과:503-1101~2)

"수산업발전기금 2002년까지 3조 조성"

수협 건의 단계일 뿐 검토한 바 없어

해양수산부

9월 9일자, 내외경제

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조정과 첨단 수산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공유수면매립분담금 부과 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2002년까지 3조원의 '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수협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해양수산부는 이 자료를 제출받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또 수산발전기금 조성은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아울러 수산업법은 지난 2년동안 어업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지난 해 12월 개정 완료했으며 현재로서는 다시 개정할 요인이 없음을 밝힌다.

(수산정책과:567-2429)

국무회의 주요의안 (9월 9일)

대입 특차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 못하게
직무명령 어긴 사상자 '지원대상자' 예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및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사망이나 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구분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예우키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용시설의 이용보호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로 돼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 연령을 삭제,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취업보호실시 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일부 고교에서 대학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특차모집 합격자를 정시모집 대학에 다시 지원, 합격토록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 대학입시부터 특차모집에 합격한 자의 경우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는 중학교 내신성적 및 선발고사 이외의 방법으로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별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편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2학기 편입학 대상을 종전의 '편입학하는 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서 '편입학하는 학년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변경했다.

國政 안테나

4자회담 등 열어 北도우며 개방 유도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민족적 예지와 힘을 어떻게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은 우리에게 마침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경수로지원 그리고 4자회담 개최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 북한을 도와가며 개방을 유도하면서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시키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머지 않아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高 建〈국무총리, 9월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오찬 인삿말〉

WTO내 무역 자유화 논의 적극 대응

○…21세기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복지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선·개도국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정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후생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금융 등 서비스 협상 및 뉴라운드 개최 등 WTO 중심으로 논의중인 각종 추가적 무역자유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내제도의 선진화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 9월10일 '97 Korea Summit 기조연설〉

공명선거 표어

깨끗한 한표 - 깨끗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時 論

'21세기 국가과제'는 도약 청사진

高 英 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따라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단순히 국경상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과거 무역협상의 주 의제였다면, 이제는 국제규범에 맞추어 국내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행해지던 특정산업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나 보호 및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보다 공정한 국가간 교역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무한히 넓어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경제적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

국내정책 국제규범 틀에 맞춰

세계화시대를 특징짓는 단어는 개방·자율·경쟁·효율이다. 경제 각 부문에 뿌리박혀 있는 독과점적 이윤을 제거하고 정부·기업·은행·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체제 하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경제행위를 영위할 때 우리 경제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장기적 고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21개 국가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개발연대의 사고와 관행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 21개 국가과제의 주된 메시지이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부문은 정부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는 그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조직체계와 조직운영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정부는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은 민영화·민간위탁 등을 통해 보다 비용효과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또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타파하여 공정한 경쟁의 틀을 구축하고 진입·퇴출의 벽을 낮추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못지 않게 기업·은행·근로자 등 민간 경제주체들도 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정부의존적인 행태를 버리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결정과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되어 부실규모가 위험수위에 이른 금융부문도 일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은행 부실채권을 정리함과 동시에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자본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은행은 스스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체제로 내부경영을 쇄신해야 한다.

능력개발·의식전환 서둘러야

근로자들 역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기업의 흥망과 부침이 다반사가 될 것이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또 기술진보가 인적자원 집약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기술 근로자와 저기술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끊임없는 능력개발과 기술습득을 통해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독과점적 이윤만을 주장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 계층의 기득권이 침해받게 된다. 구조개혁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개혁이 초래할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용기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로원 방문 高建총리는 추석절을 앞둔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서울시립양로원을 방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高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석절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위로했다. 【趙宇東기자】

일간 14종·주간 434종 등록취소

창간지연·발행중단 정간물

공보처는 지난 8일 南廷判 공보처차관 주재로 제2차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행물 등록후 오랫동안 미창간되거나 발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8백83종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후 처음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공보처에 등록된 정간물 4천32종(8월말 현재)의 22%에 해당된다. 매체별로는 △대한경제일보 등 일간지 14종△주간지 4백34종△월간지 이하 4백35종이다. 사유별로는 1년이내 미창간돼 등록취소된 간행물이 5백92종이며 1년이상 발행이 중단된 경우가 2백91종이다.

공보처는 지난 95년 12월 정간법이 개정돼 등록청의 직권등록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들 발행인에게 정상발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이해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창간 및 발행중단 사유를 밝힐 수 있도록 청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문후에도 자진 등록철회와 폐간신고를 유도해 왔다.

발행·편집인 2년간 규제

개정된 정간법에 따르면 등록청 직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일체의 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공보처는 앞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간행물의 경우에도 사실상 제호만 등록된 채 장기간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이 중지된 간행물은 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洪永模기자

노동시장 유연성 살리기

계약·시간제 근로 적극추진

자율성 살려 임금 시장원리에 맡겨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상품'으로 불리는 파견 근로제를 비롯, 계약직 근로·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경제안정·실업예방 도와

이는 지난 4일 선정발표한 21개 국가과제중 노동부문과 관련, 노동주체의 인식변화와 21세기형 근로형태의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관행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 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안정과 실업예방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이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고, 노동시장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고용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 파견법' 제정방침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약 20만명에 불과한 파견근로자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직 근로제에 대해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계약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의료·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 계획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조정시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능력·성과·직무에 따라 임금책정이 되도록 유연성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취업관련 모든정보 개방

또 전국취업정보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원자료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민간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진형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근로자와 기업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근로자들도 이제는 노동개념에 대한 의식을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바꿔 한 직장에만 몸담는다는 생각보다는 직장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채용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험 적용과 차별 금지를 위해 다양한 근로조건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宣慶喆기자

國政 이렇습니다

의료·환경개선 서둘러 삶의

문민정부 개혁은 지난 4년반동안 쉼없이 계속돼 왔다. 지금은 개혁의 성과를 하나씩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된 개혁작업은 선거국면이나 정권교체기라 해서 중단되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간 진행된 문민정부의 국정개혁과 이를 통해 달라진 '삶의 질'을 재조명해 본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한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안보 현안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4년반동안 문민정부는 개혁방향을 우리 사회의 '합리화·정상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계화·정보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파'에 두고 강도높고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개혁작업을 민간의 폭넓은 참여 속에 실천하기 위해 민간주도 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활용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부조직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개혁과제를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좋은 선례를 남겼다.

安家없애고 軍 사조직 제거

▶권위주의 잔재청산 및 봉사행정 구현 = '안가' 철거 등 청와대 스스로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며 안기부의 정치관여를 금지시키고 군내 사조직을 제거하고 군통수권을 확립하는 등 구 권력기관의 제자리찾기 작업을 완수했다.

대통령의 자발적인 재산공개이후, 과거 정부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단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방화시대를 열고 민주정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국민 및 일선행정기관 등의 제안을 받아 전·출입신고 절차간소화, 녹색운전면허증 등 2천4백여건의 쇄신방안을 확정 시행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정의 실현 =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여 경제정의의 기반을 확립했으며,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벤처기업 육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연내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농어촌의 회생과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을 위해 98년을 목표로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획기적 농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대한 연간 투융자규모도 92년 2조8천억원에서 96년 7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21세기를 향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제정·공포했다.

교육재정 GNP 5%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 =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98년 목표로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기반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수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법조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환경모범국가 기반 마련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으며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수질·대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대책을 시행했으며 응급의료제도의 효율화, 의료보장제도 개선 등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등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위향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21세기에 대비한 세계화·정보화 추진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을 위해 '세계화'를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으로 제시하고 국

92년·97년 주

분 야	1992	
의료보험 급여기간	180일	270
노령수당	1만원	3만 ~5
노인복지 시설	119개소	171
장애인생계보장 수당(대상자)	2만원 (1만 2천명)	4만 (4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수준 (최저생계비 대비)	58%	90%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중학교·실업고	중 전체
보육시설 (대상아동)	4,513개소 (12만3천명)	13, (45

무한경쟁 시대 대비 벤처기업 육성
젊은이 정착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

안정세 금융시장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 = 올들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대기업의 잇단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인해 이들 기업에 대출해준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어려워진 바 있다. 그러나 성장·물가·대외지급능력 등 우리 경제의 기본여건이 건실하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도율 올해들어 가장 낮아

특히 시장실세금리는 지난 3~4월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환율도 9백~9백5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음부도율도 금년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주식시장이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기업의 신용위기 확산과 동남아 증시폭락 등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외채 정부가 보장 =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혈맥과 같은 존재이므로 경제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국내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한국은행이 정상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행의 증자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출자해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 조성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국고 일시여유자금 1천억원 규모를 예치할 계획이다.

시장 실세금리 3~4월 보다 낮은 수준
외환 수급구조 탄탄 '위기론' 어불성설

▶근거없는 외환위기론 = 일부에서는 현재의 우리 금융시장 상황을 94년의 멕시코나 최근의 태국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 외환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초경제여건, 경상수지 적자규모, 환율운용, 외환수급구조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을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멕시코나 태국은 외환위기 당시 8%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금년중 3%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멕시코·태국 등은 계속된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초래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여건과 외환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됐으므로 원화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투기성 자금 유입규모 적어

멕시코·태국 등은 채권 및 주식시장을 급격하게 개방함에 따라 단기투기성 자금

질 높여

요 사회복지 비교

1997	비 고
일	장애인 · 노인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폐지(1996)
5천원 5만원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 실시
개소	노인전문 요양시설 (1992년 0개소→1997년 16개소)
5천원 만5천명)	전화요금 할인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자활지원센터 (1992년 0개소 → 1997년 10개소)
고교생 세	자활지원센터 (1992년 0개소→1997년 10개소)
315개소 만7천명)	1997년은 목표치

정 각분야에 걸쳐 49개의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확정 · 추진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등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정보사회의 신경체계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1단계로 97년까지 전국 80개도시를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가 92년 4.4%에서 97년 16.3%로 전망되는 등 최근의 국가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96~97년간 39만대의 컴퓨터를 각 학교에 보급하여 1학교 1컴퓨터교실을 설치하고 2천8백여개교를 인터넷에 연결시켰다. ■

이 과도하게 유입되었으며 이들 자금이 외환 · 금융시장을 교란시켰으나 우리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이 실물경제활동 연계부문, 장기자본시장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규모가 적어 이들 자금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총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작년말 현재 21.6%로 개도국 전체평균 37.7%나 세계은행의 저 채무국가 기준 48%를 크게 밑돌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이 비율이 지난 94년 37.8%에 달했으며 태국은 지난해 49%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제반 경제여건이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도 같은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오익제 사건」 친북세력 암약 증거

對北 곡물지원 국제사회 앞질러

안보현안 문답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긴급한 상황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3년이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파탄 · 식량기근 등으로 주민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김정일 중심의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갈등 증폭 및 군부 강압통치 등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공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등 빈틈없는 '총력안보' 태세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北 사전 공작, 체제위기 호도

▶오익제 사건의 진상은 = 북한은 위장 종교단체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를 앞세워 지난 93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당시 천도교 교령이던 오익제를 접촉, 오익제의 재북가족(처와 딸)을 미끼로 은밀히 포섭했다. 이후 오익제는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 대상 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해 오다, 김정일 정권이 위기에 봉착하자 오익제를 체제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월북시킨 치밀히 계획된 북한의 공작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시각이 있는데 = 이번 사건은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정치권의 이해와 연관되어 왜곡 변질되고 있다. 당국이 정치공작 차원에서 입북시켰다거나 입북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는 식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안보기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여야를 떠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당국의 관찰대상이었다는데 왜 월북을 막지 못했나 =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당국의 대공 방첩활동을 인권문제 등과 연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던게 사실이다.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간첩사건조차 용공조작으로 매도당하는 등 대공활동여건이 악화된 것도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90년 8월 이후 북한주민접촉 방북승인자는 모두 1만7천명으로 이를 모두 추적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비 10% 줄이면 이팝 먹여

▶북한 식량난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북한의 곡물생산은 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백30만톤으로 수요량 5백80만톤에 비해 매년 1백50만톤이 부족한 만성적 부족상태가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그간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나 = 북한주민이 굶고 있는 것은 엄격히 말해 굶는 것이 아니고 당국에 의해 굶겨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내총생산의 4분의1인 2백23억달러(95년말 기준)를 군사비로 충당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이후 금수산기념궁전 등 우상물 건설에 9억달러를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미 1만2천톤(약 5백만달러)이면 북한 주민 전체에게 하루분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군사비의 10%만 줄여도 1년간 쌀밥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포가 굶어죽어 간다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 정부의 기본입장은 같은 동포로서 가급적 큰 폭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95년 이후 우리의 대북지원 실적은 총 2억8천만달러로서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지원한 2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가 =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동포애에 입각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북한당국이 대남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식량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선도아래 '질서'있는 지원을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 민간단체들도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하고 있는 북한의 이중적 자세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황장엽 증언의 중심메시지는 무엇인가 = 황장엽 증언의 중심 메시지는 김정일에 의한 남북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므로 우리가 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남북이 공멸하여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에만 응하면 한 · 미 양측이 대대적 식량지원과 경협을 제공하겠다는데도 북한은 피폐한 경제 상황아래서도 차일피일 핑계와 트집으로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감추어진 전쟁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임진왜란 · 병자호란, 가깝게 6.25는 전쟁에 대한 경고를 등한시함으로써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안보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

▶소위 '황장엽 리스트'의 정치적 이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 항간에는 소위 '황장엽 리스트'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리스트' 같은 것이 별도로 제시된 것이 없으며 우리 언론이 만든 조어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됐다.

다만 황씨가 오랜 세월동안 북한 고위층 지위에 있으면서 득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공수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적중이며,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을 정치에 활용할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

▶황장엽씨의 사상전향 논란에 대해 = 황씨는 북에 있을 때도 주체사상의 이론적 오류와 현실적 한계성을 인식하고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품어오다 망명의 길을 선택했고 그간 수차에 걸쳐 주체사상을 통해 김부자 보위에 앞장서 온 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표출한 바 있어 사상전환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군사력 65%이상 전진배치

▶북한의 최근 전쟁준비 실태는 = 우선 북한은 우리의 1.5배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 비해 병력 1.5배(1백5만), 주요장비 2~3배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전 군사력의 65%이상을 평원선 이남에 전진 배치시켜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도 현위치에서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가능하며 특히 지난 95년10월 미그17기 및 IL-28폭격기 등 항공기 1백10여대를 전방에 전진배치하여 서울까지의 공격시간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 2백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전방에 추가 배치(총5백60여문)하고 스커드미사일 기지 증설 및 전국 규모의 군 · 민 합동 '전시전환훈련'(3월20~30)을 실시하는 등 전쟁대비태세를 확충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은 민생은 외면하고, 전쟁물자는 비축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양곡 · 유류 등 주요 전쟁물자는 외부 지원없이 3~4개월간 전쟁수행이 가능한 양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축시설을 산간오지에 지하화함으로써 전시 생존성을 극대화해놓고 있다.

대남 적개심 고취로 전쟁 열기 주입에도 여념이 없다. 북은 "전쟁시는 미제와 남조선을 싹쓸어버림으로써 총대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대남무력 통일과 승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97. 4월 군창건 열병식).

그들은 또 우리의 정치일정을 남침 호기로 간주하고 있다. "대선이 있는 97년이 남조선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가 될 것이며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식량난 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현 능력과 태세, 김정일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판사판식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공무원 복무 지침

특정후보 지지·반대 발언 못한다

귀향공무원 국정방향 이해 구해야

정부는 지난 9일 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추석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高建 총리는 이 지침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 한층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에 친절·봉사정신을

高리는 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성을 발휘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기간중 모든 공무원은 국정의 주요 방향과 부처별 현안사항을 숙지, 귀향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및 행동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주요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무원은 또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사태에 대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체제를 갖추는 한편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는 등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 추석을 어느 때보다 검소하고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 각종 금품이나 선물 등의 제공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우이웃 돕기에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권장했다. **全宣珠기자**

선관위·국정신문 공동

공명선거 캠페인

각종 단체의 활동

국가·지자체 보조단체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상 금지된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는 선거부정감시 등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 수 있다(법률 제10조 참조).

다만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단체의 공명선거 활동에 불공정한 활동이 개입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관위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단체 등은 공명선거 관련 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또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중앙회 및 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민방위대와 예비군 조직체·재향군인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관련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정당 소속의 당원연수원 및 기관·단체)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또는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단체도 선거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

이사람

"명절때 마다 비상" 고속도순찰 지휘탑

孫昌浣 경정
고속도로 순찰대장

"올 추석의 경우 귀성차량은 분산이 예상되는 반면 귀경차량은 일시에 집중돼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더욱 바빠지는 고속도로 순찰대 孫昌浣 대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올 교통대란에 승용차 이용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올해 귀성예상차량은 지난 해보다 3.3% 증가한 1백1만3천여대. 연휴기간 중 귀성객 대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孫대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속도로 교통관리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단속보다 운전편의 도모"

"단속보다는 운전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생각으로 귀성객들의 편안한 귀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성객들께서는 교통정보를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접하고 있는 교통경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입체 작전'이라 불릴 만큼 첨단의 장비와 정예인원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구난체계를 갖췄다. 순찰대원 5백18명을 중심으로 기동대 3백6명, 차량 2백60대, 순찰오토바이 78대, 헬기 19대, 견인차 3백8대, 구급차 40대 등이 동원됐다. 순찰대는 헬기와 지상의 무선교신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상의 '만남의 광장'과 중부권의 '엑스포 IC', 남부권의 '김해공항'에 각 2대의 헬기를 배치,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환자 후송에 대비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해 입간판·현수막·전광판을 이용, 우회도로 정보·간이 휴게소·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안내책자를 제작해 귀성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 차량을 갓길로 옮긴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孫대장은 "비상근무로 명절 한번 제대로 지내보지 못한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버스전용차선 위반·음주운전·갓길 운행·쓰레기 투기·끼어들기 등을 하지 않는 명랑한 귀성·귀경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蔡洙逸기자**

경복궁 흥례문 복원 기공식 지난 11일 구 조선총독부가 철거된 자리에서 경복궁 흥례문 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2009년까지 1천7백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되는 흥례문은 본래 광화문과 조정문 사이에 있었던 문으로 일제가 우리 민족의 맥을 단절하기 위해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면서 철거됐던 궐문이다. 【朴俊洙기자】

美 세계지도 동해·일본해 함께 표기

지도업체 랜드 맥낼리社

공보처 동해표기 추진 첫 성과

타임·뉴스위크서도 큰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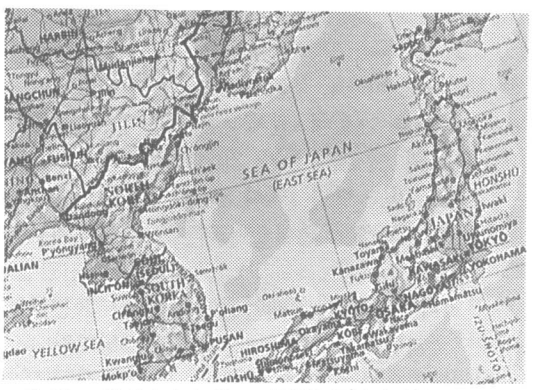
미국의 대형 지도업체인 랜드 맥낼리사는 최근 제작한 세계지도에서 한반도와 일본섬 사이의 바다 명칭을 종전의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East Sea)'를 함께 넣어 발행했다.

이는 공보처 해외공보관이 지난 82년부터 벌여온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지도내 '동해표기'를 적극 추진해온 첫 성과이다. 앞으로 다른 지도 제작사의 지도발간시 동해가 표기된 이 지도를 원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최근 일본해 표기로 물의를 빚은 타임·뉴스위크 등 잡지사와 브리태니커출판사 등도 랜드 맥낼리사의 결정에 관심을 표시하고 지도가 출판될 경우 재검토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가 표기된 이번 세계지도는 '프리미어 월드 애틀라스'로 맥낼리사는 앞으로 '뉴 인터내셔널 애틀라스' '코스모폴리탄 월드 애틀라스' '투데이즈 월드 애틀라스' 등 기존 3종의 세계지도 개정판 발행시에도 동해를 표기해 넣기로 약속했다.

해외공보관은 빠른 시일내 외무부를 비롯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갖고 '동해'에 대한 표기를 함께 쓰는 모델을 확정, 오는 98년 1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때 이를 공식 확인받을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각국이 동북아 지도제작시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洪永模기자**



美 랜드 맥낼리사가 최근 제작한 동북아지역 지도.

내가 읽은 책

잠재능력 일깨울 '성공' 지침서

李 鉉 熙
공보처 분석과 사무관

현재의 상태에서 성공은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고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성공은 공부 잘한 사람, 일류대학 출신, 배경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등 몇몇 특출한 사람들만이 차지한 것인가.

이 책의 집필자 데브라 벤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최고의 테크닉은 '인간관계에서의 유능함'이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성실함에도 직업상 별다른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 사업가 문제점 지적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이 실려 있는 이 책은 그 어렵다는 필기시험과 토익을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낙방하는 취업 재수생, 성실하고 유능하면서도 승진과는 거리가 먼 직장인,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비즈니스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그 해답을 알려준다. 즉 머리가 좋고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만 해서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현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담과 강연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2천여명의 성공한 기업인들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 즉 최고 경영자와 최고 업무책임자 80여명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책 중간중간에 소개해 놓았다.

친화·대인관계 기술 설파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공의 기초'라는 서문에서 몇가지 성공의 지침을 소개한 후 제1부 '눈에 띄기-강한 인상을 주는 기술'이라는 부분에선 첫인상 관리하기, 머리를 써서 표현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라, 악수방법, 신체접촉 요령, 바른 자세 요령, 말과 침묵 등 상대방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테크닉을 기술하고 있다.

제2부 '친화-대인관계 기술'에서는 조직에 적응하고 따라가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대인기술, 이 기술은 결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술책이나 계략이 아니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비즈니스 관계법, 화술로 친화를 맺는 법, 유머로 친화를 맺는 법, 호의로 유대를 맺는 법, 질문요령 등 대인관계의 테크닉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자신감 키우는 방법 소개

제3부 '자기 완성의 기술'에서는 '지도자는 낙천주의 철학을 갖고 있다', '성공은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법 등 지도자의 철학과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용기와 배짱,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혜, 기회를 포착하고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행운, 정상에서의 삶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끝부분에 '정상의 사람'들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 정직하다, 동기를 부여해준다, 타인들을 돋보이게 해준다 등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이 책 내용을 요약해 놓은 '성공적인 직업인의 풍모를 위한 간이 참고지침'을 기록해 놓았다. 이 부분은 항상 휴대하면서 인생의 지침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빅맨들이 가르쳐 주는 생생한 비즈니스 테크닉인 이 책은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새롭게 조명했으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컨트롤하는 지침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섹세스 바이블』은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비즈니스맨은 물론 앞으로 경영행정을 해야 할 기업가적 공직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줄 것이다. ■

『석세스 바이블』
데브라 벤튼지음
삶과 꿈刊 · 1997 版

영어한마디 〈101〉

'it'

미국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한 청량음료 광고문 중에 "… is it"이 있다. 이때의 'it'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닌 관용적 표현이다.

가령, "That's it!"(바로 그거에요!)에 쓰이는 용법과 일맥상통한다. 'it'을 이용한 다른 표현 중에 "That's about it (all)"이 있다. 이 문장은 매우 유용한 표현으로서 우리말로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갈 수 있다.

A : Anything else?
(이밖에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B : I think that's about it for the moment.
(이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Michael Glass
조 숙 환 〈西江大교수〉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는 심각한 범죄

申 鉉 國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이번 4일동안의 추석연휴에는 3천만명의 인구와 2백30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버스·열차·승용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총동원될 것이고 예년처럼 고속도로 등에서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발생량은 크게 줄고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행락지·경기장·고속도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곳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여름휴가철에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가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로 얼룩졌다. 휴가철 한달동안 전국 주요 피서지에서는 5만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된 건수만도 9만8천건, 이에 부과된 과태료가 3억6천만원이었다.

추석 상하행길 집중단속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만큼 쓰레기문제는 내각 차원에서 전쟁을 하는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절을 전후한 5일간을 쓰레기투기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관리청 및 시·군·구 환경관계공무원, 경찰지원인력 등 총 2천5백명을 동원, 고속도로·국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쓰레기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과태료 최고 20만원 부과

특히 이 기간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도 담배꽁초·휴지를 버리는 경우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봉지에 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종전의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법 규정을 강화했다.

한마디

그러나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이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챙긴다는 가장 단순한 원칙을 항상 의식하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귀경길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백 10만개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 이 다용도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양심을 담아 쓰레기없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

통일 대비 산림기술인력 양성 힘써야

金 相 均
산림청 기술지원과장

근래 들어 자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보면 산림보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북한의 식량부족이 처음에는 한발이나 기상 때문인 것으로 인식됐으나, 근본원인은 산림황폐와 기술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디오피아 어린이를 연상케하는 깡마른 아이들과 흙먼지 날리는 북한의 황량한 들판은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의 드넓은 고비사막은 과거 산림지역이었으나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을 제거한 결과이며, 방글라데시의 한발·홍수 피해도 산림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北 식량사정 벌목이 원인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이후 60년대까지 비슷한 실정이었다. 식량과 땔감이 부족해 기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말없는 산뿐이었던 시절이었다. 직장도 변변치 않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자르고, 임산물을 채취해다 연명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낙엽까지 긁어 땔감으로 썼다.

이렇게 산을 과다하게 이용하다 보니 산림이 황폐해져 산사태가 일어나고 농토는 유실돼 척박해지고, 산으로부터 수원 함양이 되지 않아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다.

후손들에 빌린 자연환경

다행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정책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헐벗었던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의 제모습을 찾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풍요로움과 이국 어느 나라에 온 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됐다.

산림의 보전과 개발은 항상 상존하는 대립관계이지만 지금의 자연은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린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보답할 최소한의 산림과 생태계는 보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또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여기에 대비해 우리는 정부차원의 산림과 산림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경영가와 기술인력의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지자체 소식

성남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개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지난 9일 개관했다. 산성동 일대 2백87평의 부지에 13억5천7백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착공, 1년만에 완공을 본 복지회관은 지하1층에 무료경로식당과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사무실·소회의실이 각각 위치하며 2층에는 기능보강실·사회교육실·취미교실, 3층에는 강당(예식장)과 취미교실 등이 각각 갖춰져 있다.

연기군 월산산업단지 내달 착공

〈충남〉 연기군의 월산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군은 지난 9일 월산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충남도가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99년말까지 모두 1천7백70억원을 들여 남면 월산리 일대 1백64만6천㎡의 터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산업단지에는 음식료업과 종이제품·화학제품 등 모두 7개 업종이 유치된다. 군 관계자는"현재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회사를 포함, 6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혀 왔다"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뿐 아니라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농업개발센터 11일 문열어

〈충북〉 충주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갈 충주 농업개발센터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충주시 봉방동 농촌지도소 부지에 29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2천5백31㎡ 규모로 신축된 농업개발센터에는 조직배양실·가축질병 진단실 등 각종 연구시설과 유통정보실 등이 갖춰져 있어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은 물론 농민들이 영농 및 축·수산에 관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요리 실습실·예절실 등도 들어서 농촌지역 부녀자들의 친목도모와 생활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포항 철강공단 70만평 추가조성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일대 약 70만평에 오는 2001년까지 포항철강 제4단지가 조성된다.

포항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난 4일 공단조성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부서와 협의·검토중인데, 오는 10월경 경북도의 사업인가가 나면 본격 공단조성에 들어간다.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사업인가를 받아 1천7백40억원을 투입, 오는 2001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부지 가운데 공단용지가 64%,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용지는 36%정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포항철강 4단지가 완공되면 기존 1·2·3단지와 청임단지 등 모두 5개의 공단이 설립돼 부족한 공업용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 우항리, 공룡 테마파크 조성

〈전남〉 전남도와 해남군은 세계적 규모의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 발자국 등이 발굴된 황산면 우항리 일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 자연사 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학술세미나 및 현장조사·공룡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시설을 갖추는데 22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3백4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우항리 일대에서 발굴된 익룡 발자국은 최근 국제 학술대회와 현장답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麗 통합에 주민 88.4% 찬성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군이 하나로 통합된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여수시와 여천시·군에 대한 통합 의견을 묻는 주민 찬반투표에서 찬성 8만6천6백76표(88.4%), 반대 1만2천6표로 최종 집계, 통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려통합 작업은 상대적 피해의식으로 인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불구,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추진돼 통합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3려지역 자치단체는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시·군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한 '통합을 위한 특별법 입법 건의서'를 내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제주, 지진대비 실제훈련 실시

〈제주〉 북제주군은 오는 19일 한경면 용수리사무소에서 제주경찰서·한국통신제주본부·한국전력 등 5개 기관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7 저진대비 실제훈련을 갖는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발생에 따른 도로파손, 상·하수도 시설파손, 단전, 통신두절, 건축물 화재 등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사태수습과 응급복구, 인명구조훈련 등을 실시한다.

정읍, 건강증진 자전거타기 운동

정읍시가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 등에서 급할 때 쓰고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양심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시가 '양심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우선 시청과 시 의회에 각각 10대의 자전거를 지난 10일부터 비치, 간단한 신분확인만 거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세계 70여개국이 참가, 내년 9월10일부터 펼쳐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는 지난 10일 행사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지난 5월27일 열린 '98 세계문화엑스포' 선포식 광경.

종합정사게시판

추석연휴 우편업무 실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내·국제특급우편물, 전자우편의 배달업무를 평일과 같이 계속 실시키로 했다.

다만 일반우편물 배달은 14일 하루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휴무키로 했다.우체국 창구업무는 14일부터 연휴기간동안 모두 휴무하되, 서울중앙우체국을 비롯한 전국 16개 우체국에서는 주간 우편물 접수업무를 계속한다.

연휴기간 중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은 서울중앙·부산·대전·광주·대구·전주·춘천·제주·청주·울산·구미·포항·마산·창원·김포 제1·2청사 등이다.

장애인 공무원 공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신설로 확보된 별정직공무원(7급)에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 1명을 공개 채용키로 했다.

응모자격은 35세미만인 장애인으로 건축·사회복지·행정학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장애인복지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면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맡게 될 이들 공채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별정직 6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응시마감은 27일까지.

문의 02-503-8500

공무원 이삿짐 보관

조 달 청

앞으로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이 해외나 지방근무시 이삿짐을 조달청 창고(경기도 이천)에 맡길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최근 이삿짐 전문업체 대한통운과 협의, 필요한 경우 공무원들의 이삿짐을 저렴한 가격으로 통풍과 온·습도가 조절되는 안전한 최신 정부창고에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관료는 컨테이너당 월14만원이며, 1년이상 장기보관땐 10%씩 할인된다. 문의 02-546-0929(교213)

자원봉사자 모집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委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통역·번역 △경기보조 △방송·전산·통신 등 기술 △사무지원 등 행정 △청소·세탁·후생 등 서비스 △문화예술 행사안내 △출입통제 등 19개 직종이며 선발인원은 모두 7백9명. 용평(6백3명)·강릉(89명)·서울(17명) 등에서 활동하게 될 이들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99년 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15일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 선발된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육훈련이 실시되며 대회기간중 교통비와 급식비 등의 실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420-3833)와 서울시청 민원실(731-6011), 그리고 강원도 각 시·군과 도내 대학 그리고 대회조직위원회(0361-243-9975) 등으로 하면 된다.

공공채널 K-TV

(케이블TV 채널14)

◆**오늘의 국정**
△실종된 양심 1부-쓰레기(15일, 오후5시30분) △실종된 양심 2부-교통질서19일, 오후5시30분)

◆**영상 어제와 오늘**(16일, 오후2시)
△테마여행:추석놀이, 추석빔, 성묘, 귀성객 등 지금과 달라진 50·60·70년대의 추석풍속을 살펴봄

◆**해외특집**
△선진질서와 환경보존(15일, 오후8시30분) △농업도 경영시대 1·2부(16일, 오후10시30분)

◆**국내특선**
△한국의 시제(15일, 오후12시30분)
△남도의 장인-진다리붓, 탱화장(15일, 오후10시)
△종묘대제(16일, 오전10시50분)
△팔만대장경(16일, 오후10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18일, 오전10시)

◆**정보파노라마**(16일, 오후4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먹어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전통놀이